

# ‘하노이 노딜’ 기점 북미협상 표류… 韓 비핵화 안갯속

## 집권 반환점 文정권 현주소

〈下〉 오지않는 ‘한반도의 봄’

남북회담 3회, 북미회담 2회 등 文 집권 초반 ‘평화통일’ 기대감 현재, 한반도 비핵화 북미 교착중 野 “北 상중도발… 패륜적 도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오후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로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구사한 강경 외교로 인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햇볕이 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집권 초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창의적인 비전행보를 선보이며 국민들로부터 ‘평화통일’ 기대감을 심어줬다.

실제 문 대통령 집권 후 지난 2018년 한해에 3번(4·27, 5·26, 9·19) 정상회담이 열렸고, 문 대통령의 중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6·12)과 2019년(2·28)에 각각 열렸다.

역대 최초로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45분쯤 비무장지대(DMZ) 관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정상간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 정계 일각에선 남북미 정상간 만남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이 다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문 대통령이 구사한 창의적인 한반도 평화 행보는 승승가도를 보이는 듯 했다. 문제는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 ‘현재’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자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도 이상징후를 보인 것이다. 북미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어떠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당시 정상회담을 일컫는 ‘하노이 노딜’을 기점으로 9개월째 북미협상은 표류 중이다. 그래서인지 지난달 15일 29년만에 평양 원정으로 진행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 한국-북한 축구’는 생중계·응원단 없이 치러졌다. 한반도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변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봄’을 알리고자 한 문 대통령의 노력은 100% 드러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현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작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고도 이튿날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래서인지 여권에서는 초조한 모습

을 보이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의 남북미 관문점 회동, 그리고 10월의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북미는 탐색전과 힘겨루기를 넘어 어제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의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한반도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연석회의’ 때 “북한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도발을 감행했다. 최소한의 예

의도 없는 상중도발”이라며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감행한 도발이다. 북한의 대남 제스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낸 조의문을 두고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 딱하다”며 “이번 도발로 북한 김정은에게 남북관계나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 우리 안보상황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국민들께서 새삼 실감하셨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조연에 그칠 수밖에 없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문 대통령 입장에서 북미정상간 회담으로 비핵화 관련 최종 결단을 기다려야 한단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 북미정상간 담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맞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부한 만큼, 북미정상간 협상이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조율할 수 있는 지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론 통합 과제를 해결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軍 50만 시대… 드론봇 등 ‘첨단기술 軍’ 개편 “고령화사회… 재원확보 시급”

〉 1면 ‘인구 급감에…’서 계속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 빨라질 듯 예비교사들 반발 예상 ‘설득’ 숙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준 계획에 대한 신뢰 보화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 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 내년 2분기로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 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절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교과 지도 자격은 광역화 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세분된 자격을 과학으로 광역화하되 심화전공을 표시하는 식이다.

**‘인구정책 TF’ 2차 발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교육 분야**

-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 양성체계 개편
-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 (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학교 내 지역사회 설치)
- 평생학습 강화(성인진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

**국방 분야**

-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및 상비병력 감축
- 정원구조 재설계 및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검토
- 전함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단계적 감축
- 여군활용 확대 및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 완화

**지방행정 서비스**

- 공공생활서비스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연결체계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노인·장애가구 등)
- 지치단체간 협력(문화·체육시설 공동 제공, 기관 공동설치 등)
- 맞춤형 공모사업 혁신(중앙부처 중심 -> 지자체 주민주도)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교육계 저항 예상

하지만 이번 교육 분야 인구변화 대응 방안은 어느 하나도 실행이 쉽지 않다. 특히 새 교원수급 기준 수립과 이행은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설득하고 반발을 완화해야 가능한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학생감소세를 고려하면 새 기준은 교사를 현재보다 줄이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갑자기 크게 줄자 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당국을 압박해 선발 인원을 일부 회복시킨

바 있다. 교원양성기관에 고등학교를 갖 줄일 한 학생을 입학시킨 뒤 ‘교사가 되는 법’만 가르치는 현행 교원양성체계에서는 ‘교사 수’가 곧 예비교사들의 ‘일자리 수’와 같기 때문에 교사 수를 줄이려면 예비교사 설득이 필수적이다.

◆2022년까지 군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는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회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내년부터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천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연합뉴스

2050년 노인부양률 72.6% 전망 생산연령 감소, 세수감소 가능성

저성장·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재원 확보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안 마련과 함께 정치권의 협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50년 대한민국의 노인부양률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나눈 값이다. 생산연령인구감소는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국세수입은 줄고, 국가채무비율과 조세부담률은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한국의 재정 상황이 내년부터 수입 둔화와 지출 급증으로 적자 전환해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5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6.4%로 늘어난다.

환경연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와 고령화에 따른 공공복지 지출 급증, 매년 실시하는 경기 부양책, 성장을 하락 등에 따른 경기 악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지금까지 높은 경제성장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없이도 세수가 증가했다.

부가세의 경우 1977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40년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승래 재정경제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세수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7년에 걸쳐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한다.

일본의 지난해 10월 기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93.1% 증가했고, 국제비 지출도 64.3% 늘었다. 반면 공공사업·교육·방위 등을 위한 경비는 3.2% 증가에 그쳤다. 세출 구조 경직성이 심화한 것이다.

일본은 특히 올해 일반회계 세입 101조5000억엔 중 32조7000억엔을 국가채무로 충당했다. 세출은 증가하는 반면 1990년경부터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감세정책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세입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2017년 기준 224.2%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초과했다.

다만 ▲낮은 국제 장기금리 장기간 유지 ▲30년 이상 장기간 경상구지 흑자 ▲세계 1위의 대외 순자산 보유 ▲국채 90~95% 국내자본 보유 등으로 재정 위기 상황을 겪지 않았다.

/석대성 기자